



동강의 흐름은 누가 지킬 것인가?



박 원 훈
KIST 연구위원

“동강은 흘러야 한다”

새 천년의 첫 “세계 환경의 날”인 2000년 6월 5일은 한국의 자연·환경사에 새로운 전기가 이룩된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동강(다목적)댐 (공식 명칭은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하였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구호 아래 영월댐 건설로 수몰될 자연 및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싸워 온 시민환경운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환경선진국으로 진입하였음을 동강댐 건설 포기로 입증되었음을 우리는 자부하여도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민들의 애환이 숨어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 대통령은 동강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외국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자문하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알므로 외국기관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결국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들어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한국환경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발표는 이 공동조사단의 결론과 건의를 그대로 존중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중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소중한 경험을 앞으로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막중하다. 따라서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 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공동조사단사업의 추진 개요와 결론도출, 그리고 사업수행에서 얻은 지혜를 기록으로 남김은 다른 또 하나의 사명으로 본다.

영월댐 논란

영월댐의 건설타당성은 일제시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본격화되는 등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의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90년 9월의 홍수였다. 1972년의 영월지역 홍수에 이어, 1990년 9월에도 사흘 동안 한강 유역에 큰비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강원도 전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영월지역에서는 철교가 끊겼을 뿐 아니라 사망 2명, 가옥 3,229채 침수, 이재민 3,206세대에 피해액은 689억원에 달하였다. 정부는 이에 한강수계 항구재해 대책 수립을 재가하고이어서 영월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약 2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1991년 1월 건설부는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댐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영월 주민들과 정선 주민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 시

작하였다. 홍수피해를 입은 영월 주민들은 댐 건설에 찬성한 반면에 정선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정선읍이 홍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함에 따라, 댐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홍수조절 및 지역소득 증대 기능 등 긍정적 효과가 높은 쪽으로 바라보았으나 점차 생태·환경의 파괴와 지역경제의 폐쇄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월 지역 주민들도 외부 시민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영월댐 문제를 댐의 안전성이나 동강의 환경가치 등 댐 건설과 직접 관련된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 대 환경보호’라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논쟁의 전국적 이슈로 견잡을 수 없이 확대시켰다. 심지어는 영월댐의 건설 여부가 미래의 모든 개발정책이나 댐 건설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더라도 할 것처럼 댐 건설 찬성론과 반대론 간에 치열한 상호 비판이 전개됨에 따라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거나 불신감이 증폭되면서 감정적인 대결의 양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적지 않게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공동조사사업 개요

드디어 정부는 영월댐 건설여부에 대한 장기간의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이 주관하여 영월댐 건설타당성의 재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사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공동조사연구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아래 소위원회(위원장 지영선 한겨레 논설위원)를 구성하여 조사사업의 구체안과 운영방식은 물론 공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관란부처, 강원도, 환경단체 그리

고 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100명의 후보중에서 최종적으로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가 적어도 반수가 되게 3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조기에 도출해야 함으로 새로운 조사연구보다는 수많은 기존 보고서 자료에 대한 평가분석 위주로 하고 가능하면 그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 및 대안을 전부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의 5개 분과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 수도권 물수급에 관한 사항 (물수급 분과)
- 한강수계 홍수 등 치수에 관한 사항 (홍수 분과)
- 영월댐 안전(누수)에 관한 사항 (댐안전 분과)
- 영월댐 건설이 환경생태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 분과)
- 영월댐 건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분과)

이렇게 공동조사단은 1999년 9월에 발족된 이래 2000년 5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내부적으로 불신이나 오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심각히 문제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구성원들간에 세부 전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전원이 승복할 수 있는 종합적 최종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의의

영월댐 건설 문제는 공동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분과별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조사의 수행은 물론 공동조사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동조사단원 전체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의 개발이 특히 중시되었다.

공동조사단은 각 분과의 조사연구계획과 연구분담방식을 각 분과의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조사단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토론하는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활동하였으며, 각 분과의 연구진행상황을 중간단계에서 보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위원이 자신의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당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거듭된 토론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조사위원의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존중하여 다수결에 의한 논쟁의 종결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를 그대로 보고서에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공동조사단의 운영은 한국 최초의 시도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재검토와 판단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의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기다리기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과거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조사단이 구성된 것은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시민운동의 발전에 따라 물 부족과 남한강 유역 및 수도권의 홍수 위험 등을 감수하더라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과 부족, 그리고 비용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편안함과 효율만을 추구해오던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공동조사단의 조사연구의 범위와 결론은 영월댐의 건설 타당성 검토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

만, 이는 한국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조사 절차, 결론 도출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조사단 운영 방식 등은 향후 주요 국가 정책의 타당성 검토에서 중요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단 결론 : "동강은 흐른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쓰고 있으나,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사업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보다 비용이 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다. 더구나 영월댐 건설사업과같이 수몰될 환경가치를 어떻게 계상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량적 정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정량화는 다분히 문화적, 사회적 주관성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은 결론 도출의 의사결정 흐름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영월댐 건설의 두 개 임계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댐안전성과 환경가치의 판문을 차례로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종합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던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10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5개 분과의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한 결과, 댐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대적 공학기술로 댐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영월댐 보고서의 기존의 결론을 반복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조사기간 내에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강 유역은 구석기유적과 백룡동굴 등 소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적이나 고도를 고려할 때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하며 또한 고유하고 독특한 석회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환경적 가치가 탁월한 지역이므로 후손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막중하여 영월 다목적댐의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의하여 결국 계속 동강은 흐르게 된 것이다.

환경분과 결론 요약 (일부)

동강 일대에는 총 1,838종의 동물이 서식하며, 그 중 천연기념물이 13종,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이 23종, 희귀 및 특이종이 93종, 한국산 미기록종이 39종 등이 포함되고, 신종 예상종으로서 담수어류 1종, 동굴성 거미류 2종, 동굴성 갑충류 1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식물의 종은 총 952종류가 생육하며 그 중 주요종, 희귀종 등이 188종류, 멸종 위기종 4종류, 보호종 30종류가 포함되고, 신종 예상종 3종류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 곳은 석회암지대를 대표하는 고유한 생태계와 특이한 동굴 생태계가 공존하여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며 풍요로운 유전자 자원을 보존하고 안정된 먹이사슬을 이룬 국내 유일한 자연경관 지역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론의 근거로는 전체 한국산 생물종중 곤충류의 1/10 이상과 육상 식물의 1/4이 지역에서 출현하였고, 생물자원의 풍요도로는 국립공원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한라산과 설악산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었다.

이상으로 환경 분과의 의견을 종합할 때 동강 일대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비하여 엄청나게 풍요로운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석회암 지대 및 동굴을 대표하는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댐이 건설될 때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30~80%가 이 지역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동강 일대는 댐을 건설하므로 국내 유일한 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기보다 이 곳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지로 활용함이 국익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정부에 건의하였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 **물 수급**

물부족은 2011년도에는 최대 18.8억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록 가격정책에 의해 최소 7억톤, 절수기기 보급확대 및 생활용수용 중수도시설 확대를 통해 최소 3.9억톤 정도 용수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민생활에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부족 문제를 수요절감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각

종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수력발전 전용댐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천댐 등 한강수계의 기존의 댐들을 용수공급기능을 추가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연간 약 4.8억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댐들의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여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 정부에서 추진중인 물 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물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 정부에서 수립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수원개발 등 물부족 대책을 마련한다.

④ **홍수**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의 하나로서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영월댐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영월 및 남한강변 도시들과 수도권의 홍수조절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영월 및 남한강변 도시들의 하천 제방의 지속적 보강과 함께 하천 정비 및 내수관리를 철저히 하며, 도시내 내수침수를 방지하는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유수지 등 내수배제 시설을 정비한다.
- 산림정비에 의한 홍수대책 방안 및 영월 및 남한강변 도시들에 대해 자연친화적 방재도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환경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적고 수몰보상으로 민원해소와 자연생태 보존관리가 유리할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통수식 홍수조절전용댐으로 하루 충주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⑤ **환경 및 문화**

동강지역을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이에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영월댐의 중단은 관광객 유인을 위한 난개발로 인하여 자칫하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을 더욱 훼손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 동강지역을 '천연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탐방객 제한 및 입장료 징수 등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이에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자연환경보존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주민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을 위한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선택된 후 댐건설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기에 주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주시킨다.
- 동강 관광을 21세기형의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주 후의 생활 대책을 마련한다.

● 사전 평가의 강화

대형국책사업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환경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타당성 예비조사시부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 공청회와 설명회의 전문성과 민주성의 확보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비하며 특히 사업계획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강이 계속 흐르도록 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동강 유역은 한국 유일의 독특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이라는 것이며, 이를 잃지 않기 위하여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였다면, 반대로 동강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만 하는 의무 또한 막중함을 알게 된다.

동강의 흐름은 누가 ?

공동조사단의 건의사항에서 지적되었듯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관광 난개발 등으로 환경이 댐건설로 수몰되는 것처럼 훼손된다면 영월댐을 건설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마이더스 동아일보 (7월 17일자)의 기사(발췌)

댐건설 백지화 결정(6월 5일)이후 한달여가 지난 요즘 동강 일대는 휴가철을 맞아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댐백지화 후 동강 보존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 이 속에서 업자들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 동강에는 평일 1000여명, 주말이면 보통 3000~6000명이 몰려들고 있다. 전국에서 1만 5000여명이 몰려온 16일 가운더 일대의 강변은 관광버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래프팅(급류타기)객이 몰려오면서 그 흔하던 메기나 통수같은 물고기와 비오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 색깔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원 영월군 동강 하류에 사는 정규화씨는 "사람이 최고의 오염원"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강 주변은 댐건설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월 동강보존본부 엄삼용 사무국장은 "보트들이 몰리면 강 전체를 메워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물고기들은 아예 강의 수면 근처로 나오지를 못한다"며 "특히 산란기에 이뤄지는 래프팅은 산란탕을 망가뜨려 치어들의 성장 환경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우려했다.

외지인들이 수석이나 돌단풍, 회양목 등의 분재용 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강 유역을 뒤지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한밤중에 지역 요식업자들이 그물이나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다슬기진액사업자들의 다슬기 그물망 채취도 자주 눈에

뜨었다. 이로 인해 동강 유역의 다슬기는 전년 대비 70% 이상 줄었다는 현지인들의 지적이다.

염사무국장은 "온 국민이 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동강이 한국의 마지막 비경이자 생태계 보고라는 점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방치된다면 환경보전지역이나 생태관광지구로 지정되기도 전에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선 앞장서서 배전의 열정으로 동강의 흐름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시민들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최근 환경부가 동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은 징조이나, 그 무엇보다도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조하던 사람들도 동강에 가면 나 하나 좁아야 하며 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는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환경윤리의 부재가 문제라고 본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동강의 흐름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 신종식물가능성이 높은 동강할미꽃이 영원히 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環境保全**

필자약력

- 1958. 4 ~ 1964.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사)
- 1967. 9 ~ 1971. 6. :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1963.12.1 ~ 1967.7.31 : 한일나이론공업 주식회사 (화학기사)
- 1971.6.1 ~ 1972.8.31 : 미국 휴스턴대학 (박사후 연구원)
- 1974.10.1 ~ 1975.4.30 : 미국 버팔로시 뉴욕 주립대학 (초빙연구원)
- 1972.8.1 ~ 1981.3.31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고온공정연구실장/화학공학연구부장)
- 1981.3.1 ~ 1983.4.30 : 성균관대학교 (법인 상임이사/교수)
- 1983.5.1 ~ 1986.3.31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담당선임부장/연구위원)
- 1987.6.1 ~ 1988.9.30 :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 (사무총장)
- 1984.8.1 ~ 1988.12.31 :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장)
- 1986.4.1 ~ 1989.6.30 : 한국과학기술원 (반응공학연구실장/조정부장)
- 1989.7.1 ~ 1996.3.29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공정연구실장/환경연구센터장/환경,복지기술연구단장/정책기획본부장)
- 1990.1.1 ~ 1991.12.31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 1995.5.1 ~ 1998.4.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1996.3.30 ~ 1999.3.29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1998.1.1 ~ 1999.12.31 :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한국정정기술학회 (회장)
- 1999.3.30 ~ 현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구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새가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	업	대	주	소	업	대	주	소
번호	체명	표자	소	주	체명	표자	소	주
1	대전콘크리트㈜	김기주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160	진천성우	임상록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59		
2	해상제1센터중부영업소	서권	대전광역시 서구 도아2동 164-50	㈜쓰리에스케이칼	신광식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왕리 253		
3	㈜미건의로기	박기자	충청남도 공단 용암리 686-5	미성식품	박영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심정리 722		
4	㈜이스트	강선규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1	㈜베이스코리아	권기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동리 43-2		
5	㈜동우에치어링	전광규	대전광역시 동구 기왕동 451-22	㈜동해정밀	신희중	충북 진천군 맹동면 도하리 74		
6	한국사료형미양형	유창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충동 53-8	성동농산㈜	주경림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성리 67-22		
7	강원칼럼타크㈜	조봉중	충북 청원군 감외면 면저리 326	그린포장	김성규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215		
8	㈜동양콘크리트	김기석	충북 영동군 삼천면 각계리 650-1	㈜제일유지공업	조만국	충북 음성군 금강면 유평리 307-1		
9	삼진식품㈜	심수웅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48-1	㈜세라텍	김성식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466		
10	㈜화진정밀화학	이재욱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533-3	강동정밀㈜	박천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233		
11	현대산업개발㈜	이병주	충북 옥천군 도이면 금암리 946	㈜나인	강성식	충북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318		
12	㈜제일광업	김기성	충북 제천시 두학동 산41-13	삼일면업기	안영욱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423-7		
13	㈜동림식품	장병철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369-7	이성중	이성중	진천축협농동사업소	진천축협농동사업소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78-1
14	기아화학탄소공업사	박상근	충북 음성군 금강면 사정리 432	동호제약㈜	강인식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암리 335		
15	현신수지	박찬식	충북 음성군 금강면 유촌리 173	SMF㈜	권형덕	충북 충주시 목행동 315		
16	대현타이프크㈜	정일성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383-1	오원기계공업㈜	안인식	충북 제천시 강제동 248-10		
17	신천지식품	김형철	충북 제천시 화산동 26-5	철이공사	강철만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56-1		
18	상진전선㈜	문종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2-1	수석섬유㈜ 진천지점	이영성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43-5		
19	㈜금진화학	김천현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화회리 157	광천제재	이태근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사척리 신4-1		
20	대소농산	전윤성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루리 160	하나제기공업㈜	이재춘	충북 충주시 상당구 사천동 619		
21	삼우기업	김원대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195	(합영)남부산업	변광섭	충북 괴산군 청안면 호근리 735-15		
22	다원화학	김경진	충북 충주시 기금면 용천리 514-8	공업설비㈜ 제천지점	김영현	충북 제천시 괴안동 145-7		
23	영동신공모장어㈜	박영현	충북 영동군 덕산면 박계리 241	㈜에이유	임상철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울리 220		